

# 목포시 건축행정 시민 소통 박차

## 공동주택 감사위원단 운영·건축 인허가 사전 예고제 시행

소통을 증진해 목포시가 신뢰받는 시정 실현을 위해 건축 분야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도입해 본보기가 되고 있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적극적인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위원단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 건설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기간 갈등, 용역·공사·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 자문·감사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 감사위원단'을 구성,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최근 관내 공동주택 분쟁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1건, 2015년 25건, 2016년 23건 등 해마다 20건 이상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투명성 강화·위법 근절 등

### 신뢰도 높이기 시책 도입

### 주기적 홍보·점검 강화

이에 따라 목포시는 변호사·법무사·노무사·회계사 등 10인 이내로 감사위원단을 구성해 입주자 30%이상 동의와 소명 자료를 첨부해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은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 위원회 등의 업무다. 감사위원단 운영이 본격화되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해 집단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목포시는 내다봤다.

시는 또 정기점검제 위법 발생 등 다수

인 민원과 행정쟁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 건설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매월 1회에 걸쳐 건축사협회, 위원회에 참석해 단체 의견 수렴과 함께 시정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관심대상 건축 인허가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허가 사전 예고제 대상은 공동주택, 대규모 판매시설(대형 마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무인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에만 다수인 민원 10건, 인터넷 민원(시장에게 바란다 등) 143건 등이 발생했다.

시는 특히 무허가 건축,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로 인한 시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홍보와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위법행위 발생 현황을 보면 불법건축물들이 2014년 45건, 2015년 53건, 2016년 8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위반은 2014년 39건, 2015년 16건, 2016년 29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월 한차례씩 동 단위 특정 지역(취약지)에 대한 순회 방문 등 순찰을 강화하고,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 및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게 목포시의 전략이다.

김찬의 목포시 도시건설국장은 "삶의 질 향상과 주민욕구 다변화로 건축분야에도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시대"라면서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임성지구 택지개발 탄력·LH와 협약 2019년 착공

목포 임성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목포시는 최근 박홍률(왼쪽) 시장,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이정기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와 '임성지구 개발 등 목포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지부진했던 임성지구 개발에 공신력 있는 LH가 참여함에 따라 지난 1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원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 차입금 이자 등 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감보를 감소, 인구 유출방지 등이 기대된다.

또 500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와 함께 임성지구에 조성될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이 시에 무상 귀속돼 2000억원 이상의 개발비용 절감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는 앞으로 LH와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 및 환경설계 등을 착수해 오는 2018년 10월 2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하고, 2019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주민사랑방 중국어 강좌 목포시 부흥동주민센터가 서남권 주민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문화·경제·사회적 바람직한 교류를 위해 주민사랑방 중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 목포시, 시민 토지 10여년간 무단 사용 논란

### 위생매립장·선별센터 공사 소유주와 매입·보상 갈등

목포시가 위생매립장 진입로와 재활용 선별센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다.

16일 목포시와 위생매립장·재활용선별센터 인근 토지소유주들에 따르면 B씨는 목포시가 지난 2004년부터 자신의 토지(대양동 산99-2번지)내에 무단으로 위생매립장 진입로와 재활용선별센터(내)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목포시에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담당공무원을 교체하는 등 민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씨는 목포시가 자신의 사유지에서 재활용선별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10여년 넘게 이익을 얻은 만큼 이익금 분배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 등을 주변 대양산단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감사에서도 위생매립장 진입로의 관련 자료 부재 때문에 사업연도, 당시 담당자, 토지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장 확인결과,

사유지(목포시 대양동 산 99-2번지) 510㎡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의 경우 지난 2006년 10월 12일 목포시사유지인 목포시 대양동 산 109-3번지에 설치한 것으로 신고돼 있으나, 사유지(대양동 산 99-2번지) 397㎡를 무단 점용해 설치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현 토지주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이전 토지 소유주에게 일부 진입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토지 거래시점이 24년이나 지난 탓에 당시 자료가 없고 공사했던 건설업체도 부도도 없어졌다"면서 "당시 당

당 공무원들마저 모두 퇴직해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을 제기한 토지 외에 무단 편입된 토지(산 99-4번지)가 1필지 더 있다"면서 "이제라도 당연히 보상은 해야겠지만, 대양산단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감정 등의 등을 통해 법이 정하는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 B씨는 "목포시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고지하고 수용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인 만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김준석·김병관기자 kjs0533@

## 서해해경 항공단 5년 무사고 비행

### 지구 25바퀴 거리...해경 최초 쾌거

서해해경 여수고정익항공대에서 운용중인 최신에 수색구조 항공기가 해경 최초로 도입 후 5년 무사고 비행 달성의 쾌거를 일궈냈다.

서해해경비안전본부는 "최근 여수공항 여수항공대 격납고내에서 항공기(CN-235) 5년 무사고 비행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명석 서해해경본부장은 "무사고 5년 비행을 계기로 앞으로 10년, 20년, 더 나아가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한

비행을 기원한다"면서 "매순간 주어 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터보프롭 항공기(CN-235)는 지난 2011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해 2012년 2월 여수고정익항공대에 배치된 후 서·남해역 해상 조계를 통한 해양주권 수호와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까지 지구 25바퀴에 해당하는 거리(99만9000km)를 비행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목포시 자치법규 대대적 손질 나선다

### 올 상반기 중 전수 조사

### 불합리한 조례 중점 발굴

목포시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목포시는 16일 "현실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자치법규를 정비해 행정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의 자치법규 보유 현황(2016년 말 기준)에 따르면 자치법규는 조례 375건과 규칙 113건이며, 행정 규칙은 훈령 61건과 예규 4건이다.

시는 이들 법규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재·개정 사항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부서별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에 배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 감사를 초빙해 법적 업무에 대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 청문제도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7개 분야 19명으로 청문주재관을 위촉해 행정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논쟁이 없도록 적합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현상 맞춤형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이는 지역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자치법규 재개정 시 사전 심의를 강화해 신규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 특화규제나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 개선사항을 수렴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치중 목포시 기획관리국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자치입법 강화 조치"라며 "행정규제 완화·개선으로 시민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원도심~신도심 잇는 하당고가교 8월까지 보수 공사

목포시가 양왕산 터널을 통과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대동맥인 하당고가교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벌인다.

목포시는 16일 "지난 1993년 준공돼 D등급 판정을 받은 길이 280m 폭 15m의 하당고가교 하부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이달부터 착수해 오는 8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국비 1억3600만원을 들

여 교면과 단면 3,759㎡를 보수하고 받침장치 16개를 교체한다.

또 하당고가교에 대한 도색이 오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 다리 전면에 대한 디자인 벽화 도색(2593㎡)작업도 병행한다.

앞서 목포시 건설과는 지난 2월 도비 3억4600만원을 투입해 상부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마쳤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0-3600-9955

대산프리모가발

#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물,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